

‘농경지 침수’ 구례 배수펌프장, 올해 시험가동 안했다

폭우에 농경지를 지켜줄 배수펌프장과 같은 재해 대비 시설의 연중 상시 전력공급 필요성이 강조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이 전기료 기본요금 절감을 위해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양·배수장의 전력 연결을 하지 않아 때이던 강우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최근 전남 구례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배수펌프장 전력공급이 안돼 시설 미가동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와 한국전력 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지자체는 수차례 요청에도 한전이 전기를 늦장 공급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전은 구례군이 적기에 전력공급 재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례군 마산면 일대 배수펌프장은 지난해 4월 11일 준공 당시 한차례 시험 가동 후 한 번도 재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우기에도 전력공급 실적은 전무했다.

농경지 침수가 시작된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예비전력 연결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가동됐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4월 시험 가동 이후 무려 1년 5개월만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구례군이 올해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재가동 점검을 한 달이라도 서둘러서 했다면 침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장마 전에 배수펌프장 재가동 점검을 위해 5월 초부터 전력공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전 구례지사에 발송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압 선로를 통한 상시 전력 이든 임시 예비전력이든 전기 공급을 요청했으면 곧바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자 김순호 군수가 수해 취약지역을 찾아가 점검하고 있다.

사진=구례군 제공

지난해 4월 준공 당시 첫 시운전 후 가동 실적 전무

첫 시운전 후 배수펌프장 예비전력 끊은 채 관리

구례군·한전 간 소통 부재 침수 피해 주원인 지적

또 올해 우기 전 시험 가동 미실시는 “고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배수펌프장은 시험 재가동 점검을 위해선 충분한 용수(마중물 성격)가 필요한데 배수지 물이 충분치 않아 전기가 정상 공급됐다 해도 재가동 점검은 미리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배수펌프장은 지난 2020년 섬진강 대홍수 발생 당시 구례읍 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로부터 900억원을 지원받아 ‘양정·죽연·구성·월평·냉천·사도·안촌·봉소’ 등 총 8곳에 설치했다. 준공 당시 상시 고압선로 연결에 앞서 당장 시설 가동에 필요한 예비전력 공급은 모두 이뤄졌다.

이후 상시 고압선로 구축은 8곳 중 4곳(양정·죽연·구성·월평)은 지난 5월 초 모두 완료됐다.

이번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의 배수펌프장 4곳(냉천·사도·안촌·봉소)은 상시

전력인 고압 선로를 끌어오는 데 필요한 전봇대 설치 과정에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공정률 50%를 앞두고 있다. 구례군과 한전 구례지사 측 모두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구례군과 한전 간 공방이 일고 있는 부분은 ‘예비전력 공급’ 부분이다.

구례군은 한전 구례지사에 수차례 전자공문을 발송하고 14~15일은 담당자가 직접 유선전화로 전력공급 재개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예비전력 공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아닌 전봇대 설치 지연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시 고압선로 연결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배수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요청이었다는 점에서 상시나 예비나를 떠나 상호 적극적인 소

통을 했다면 충분히 시설 가동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구례 마산면 일대 배수펌프장은 물 폭탄이 쏟아지던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예비전력을 공급해 달라는 구례군의 다급한 요청에 따라 한전 구례지사에서 조치가 이뤄졌고 농경지가 침수된 이후에야 배수펌프장이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파악한 결과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수해에 대비해 연중 365일 전기를 연결하면 한 달 전기료 기본 요금은 상시전력의 경우 800~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배수펌프장과 같은 예비전력은 한 달 기본 요금이 최고 74만원에서 최저 3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과도한 기본 요금 부과 체계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등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상시 가동 시기를 제외하면 전기를 끄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 대비 시설의 경우 전기료 기본요금 감면 내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전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구례/한정호 기자

이정선 교육감 3년 ‘소통부족’ ‘교실 중심 교육정책 복원해야’

교육 단체 3년차 토론회… “희망교실 복원관계 통한 교육 혁신”

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체제 3년 동안 일선 교사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교육정책의 지향점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단체들은 이 교육감이 현장 교사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실 중심의 교육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24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3년 차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박성광 교감은 “이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과 현장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은 교사가 움직여야 하는데 교사의 추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감은 “교육감에 있어 교사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청은 실적홍보에 매달리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교육정책 회복을 위한 제안도 제시했다.

박 교감은 “교육감이 등교부터 시작해 조회, 수업, 점심시간, 학생상담, 퇴근까지 교사와 동일한 하루일과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사와의 진짜 대화를 통해 교실 중심의 교육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무너져가는 교실의 마지막 보루였던 희망교실 복원이 시급하다’며 “교육의 중심은 교실에 있고, 혁신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실문조사를 해보면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심각할 정도”라며 “이 같은 비판의식이 커진 것은 희망교실 폐지가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교육의 본질은 사라진 채 선거공약만 남아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교육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 다수가 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와 비품 구입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전체 응답자 과반 이상은 교육청의 의사소통 방식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백 정책실장은 “교육청은 현재의 정책 방향과 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 단계부터 통합하는 체계적 개편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염선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경찰·고용부 강제수사 돌입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2계와 고용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집진기 배관(덕트)을 철거 중이던

14일 철거 작업 노동자 추락 1명 사망·2명 부상

설비 부서·안전관리 업체·철거업체 대상 압수수색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고용부 중처벌 위반 조사

노동자들이 1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64)가 숨졌고 B(36)씨가 다쳤다. 작업대에 있던 C(63)씨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가로·세로 2m크기의 대형 배관을 철거하던 중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 배관 전체가 지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관위에 있던 A씨와 B씨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실족을 방지하는 안전 고리를 체결했지만 안전 고리가 배관과 연결된 공간에 걸리면서, 배관 전체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관이 노후한데다 연결 부위에 분진 등이 쌓이면서 배관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과 근로감독관 30여명을 압수수색에 투입, 광양제철소 설비 관련 부서와 안전관리 업체,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추락 사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각 업체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이 사전 붕괴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안전 장구를 적절히 체결했는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고용부도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파악한다.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철거계획 수립 여부,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 등을 살

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오권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